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2022년 4월

전문가 기고

수요 측면의 기후변화 정책은
효율적 감축정책이자 복지정책이다.

주요 이슈

ESG위험 방지를 위한 Taxonomy 법제화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전기·전자·반도체

ESG 동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진행 현황

주요 통계

수요 측면의 기후변화 정책은 효율적 감축정책이자 복지정책이다.



인하대학교 녹색금융대학원 주임교수
지속가능경영연구소 ESG 센터장
김종대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제3 작업반(working group 3)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보고서가 확정되었다. 여섯 번째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AR6)의 일부인 이 보고서는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1. 온실가스 배출 제한과 온난화와 관련한 그동안의 성과, 2. 파리 협정에서 제시한 감축 목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준수하기 위한 목표와 활동, 3. 에너지와 도시 시스템, 그리고 농업, 삼림과 토지 이용, 건물, 운송 및 산업별 활용 가능한 감축 대안들, 4. 기관, 정책, 국제협력, 금융과 투자, 기술개발과 이전을 포함한 필요한 추가 행동의 규모, 시기 및 성격 등이다. 특이한 점은 이 보고서가 이전 보고서와 달리 수요 측면 (demand-side) 감축 대안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소비패턴을 결정하는 요인들과 수요 측면에서의 배출 감소 기회 등 감축의 사회적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의 온실가스 감축 논의는 주로 공급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으로 화석연료에서 다양한 재생에너지 공급원으로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나 이와 관련한 투자 및 원가 등에 관한 고려가 주를 이루었다. 반면에 수요 측면에서의 감축과 인간의 복지(well-being)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 정책적 배려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2021년 11월 저명 학술지 「Nature Climate Change」에 실린 논문 「높은 수준의 웰빙에 맞는 수요 측면의 기후변화 해법」은 수요 측면에서 회피, 전환 또는 개선 활동이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사회적 행동, 사회기반시설과 기술적 영

역을 포괄하는 종합적 대안이 최종 소비 부문에서 40~80% 배출 감축을 달성할 수 있었다. 개선을 통한 감축은 건물, 운송 및 산업 부문에서, 전환을 통한 감축은 운송, 식품 부문에서 특히 효과가 컸다. 식품 부문 전환은 육식 위주에서 채식주의와 비건 식습관으로 바꾸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양한 대안의 조합 중 79%에서 인간의 웰빙이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다만 사회적 차원보다는 환경적 차원의 개선이 더 명확하게 나타났다.

새 정부에서도 기후변화가 가장 중요한 국가 정책이 될 것이 명백하다. 기후변화는 윤리적이거나 국제 정치적인 이슈일 뿐 아니라 경제와 산업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디지털 전환과 함께 향후 30년 동안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절대적 요소이다. 보다 통합적이고 본질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위해서는 에너지공급원 변화, 생산 기술 개선, CCUS(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와 같은 공급 측면에서의 정책 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의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위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EU의 그린 택소노미가 원자력에너지를 녹색 경제활동으로 분류하면서 각국이 원자력 에너지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원자력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 현실적 필요에 부합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가장 최후의 공급 측면 수단으로 화석 연료 위주에서 넷제로로 이행하는 기간 동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감축 자체보다, 또 원가경쟁력 등의 경제적 고려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 안전, 심리적 안정, 행복 등을 포함한 웰빙이기 때문이다.

ESG워싱 방지를 위한 Taxonomy 법제화



이진 연구원

ESG 금융이 활성화되면서 환경·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중요해졌다.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Taxonomy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규정하고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① Green Taxonomy와 Social Tax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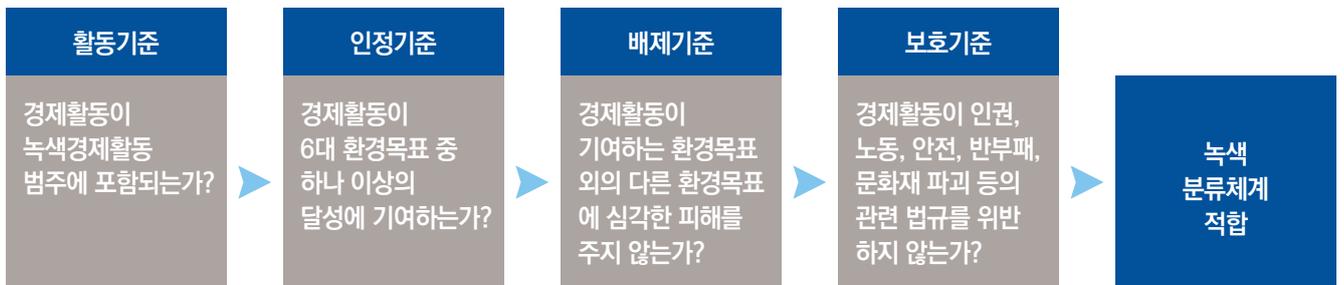
Taxonomy는 환경·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산업이나 금융을 판별하기 위한 기준이다.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의 민간 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한편, 환경·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사업이 지속가능한 것처럼 꾸며지는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하고자 제시된 기준이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규정하는 Green Taxonomy가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EU Taxonomy가 대표적이다. EU Taxonomy는 6가지 환경목표와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6가지 목표는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보호,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 등이다. 지난해 EU는 기후 위임법률(Delegated Act)에서 이 중 기후변화 완화와 기후변화 적응에 부합하는 경제활동을 구체화한 바 있다.

한국도 지난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EU Taxonomy와 유사한 6가지 환경목표를 규정하고, 녹색경제활동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판단기준은 ▲6대 환경 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할 것,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지 않을 것, ▲인권이나 노동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을 것 등이다.

EU는 사회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기준을 제시하는 Social Taxonomy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 기업이지만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EU가 '지속가능한 금융 플랫폼'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Social Taxonomy는 인권 및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노동자·소비자·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반부패 및 납세 전략의 적절성 등이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절차



4단계 기준 중 하나라도 미달 시 녹색 분류체계 부적합한 경제활동에 해당

6대 환경목표 : ① 온실가스 감축 ② 기후변화 적응 ③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 자원순환 ⑤ 오염 방지 및 관리 ⑥ 생물다양성 보전

※ 자료 : 환경부

② EU 및 한국 Taxonomy 포함 주요 경제활동

기후 위임법률을 통해 EU Taxonomy에 포함된 경제활동은 저탄소(low carbon), 전환(transitional), 지원(enabling)으로 분류된다. '저탄소'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은 탄소중립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술을 활용한 전력 생산, 수소·암모니아 제조, 에너지 효율 건축물 건설 등이 포함된다.

'지원'은 저탄소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활동이다.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컨설팅 및 관리, 저탄소 운송수단 운영을 위한 설비의 건설 및 관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데이터 솔루션 개발 등의 경제활동이다.

'전환'은 완전한 저탄소 경제활동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배출량이 적어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조건을 만족하는 저탄소 운송수단의 구매 및 운용 등이 해당된다.

지난 2월 EU 집행위는 원전과 천연가스를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 필요한 전환기적 경제활동으로 분류하는 보완된 기후 위임법률을 발표했다. 원전 및 천연가스 관련 경제활동이 EU Taxonomy에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완된 법률이 최종 승인될 경우 2023년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통해 녹색경제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탄소중립 및 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녹색 부문으로,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을 전환부문으로 규정해 한시적으로 포함시켰다.

녹색부문에는 산업, 발전·에너지, 수송, 도시·건물 등의 분야에서 64개 경제활동을 규정하고 있고, 전환부문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활동, 블루수소 제조, 친환경 선박 건조, 친환경 선박 운송 등 5개 경제활동이 포함되었다.

EU 및 한국 Taxonomy 포함 주요 경제활동

EU Taxonomy		K-Taxonomy	
저탄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등) 기술 활용한 전력 생산 · 수소, 암모니아 제조 · 에너지 효율 조건 만족하는 건축물 건설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제조 ·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철강 제조 등
		발전·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 생산 : 태양광, 풍력, 수력 등 · 수소 및 암모니아 제조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컨설팅, 관리 등 · 저탄소 운송수단 운영 위한 설비 건설 및 관리 유지 ·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데이터 솔루션 개발 및 이용 	수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공해 차량·철도·선박·항공기 제조 · 무공해 대중교통 운영 및 육상·철도 운송 등
		도시·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 개발·운영 · 제로에너지 건축물 건설 및 리모델링 등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배출량 조건을 만족하는 저탄소 운송수단(차량, 선박 등)의 구매, 렌탈, 운용 등 (2026년부터는 무공해 운송수단 관련 경제활동만 인정)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활동 · 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 수소(블루수소) 제조 ·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운송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전기·전자·반도체



김보비 객원

ESG 경영이 가속화되며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이슈가 연일 주목받고 있다.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전자·반도체 산업에서도 주력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탄소중립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제품의 생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비례 관계에 있고, 매출과 직결될 수 있음에도 글로벌 기업들은 자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거나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에 가입하는 등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 참여를 통해 자발적인 규범 준수로 대응하고 있다.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는 자율 규범을 만들고, 이행을 독려하고 협력하는 기업 연합체를 의미하는데 산업별 이니셔티브와 이슈별 이니셔티브로 구분된다.

산업별 이니셔티브는 특정 산업에서 제기되는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연합체로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한 기준과 지표를 제시한다. 전기·전자·반도체 산업에서는 ‘책임 있는 비즈니스 연합(RBA,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이 대표적이다. RBA는 사업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내에서의 이슈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① 전기·전자·반도체 산업과 ESG 이니셔티브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와 기업이 늘어나면서 전기·전자·반도체 산업에서도 탄소중립은 중요한 경영 변수가 되고 있다. 특히 EU지역을 비롯해 미국, 중국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기업들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EU는 지난해 12월 전기·전자,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등 5개 산업에 대해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 및 부과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슈별 이니셔티브는 모든 산업에서 공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슈 해결을 목표로 하는 플랫폼이다. 참여기업들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성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다. 이슈별 이니셔티브로는 ‘책임 있는 광물 이니셔티브(RMI, Responsible Mineral Initiative)’가 대표적인데 광물 채굴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파괴 이슈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달 및 공급망 관리 규범을 제시한다.

전기·전자·반도체 산업 주요 이니셔티브 가입 현황

구분	주요 이니셔티브	특징	가입 수	주요 기업
산업별 이니셔티브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 전기·전자·반도체 산업 내 공급망 행동규범 * 노동, 건강, 안전, 환경 등 보고지침 제시	196개	 LG  삼성전자  삼성SDI  SAMSUNG  SONY
이슈별 이니셔티브	 Responsible Mineral Initiative	- 구매자-공급망 간 제3자 감사 진행을 통해 책임 있는 광물 공급하는 공급업체 정보 제공	454개	 Quantum  IBM  TOYOTA

※ 자료 : 이니셔티브 홈페이지 데이터 바탕으로 KPC 재구성

② 국내외 주요 기업 기후변화 대응 사례

이해관계자들의 기후변화 대응 요구와 관련 규제 강화로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사업장 뿐만 아니라 공급망 차원에서 대응하는 경우도 있다.

애플은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했고,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를 통해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인텔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비율 100% 달성을 선언하고, 공급망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및 Net-Zero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

소니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비율 100%를 선언하고,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제출했다. 이 밖에도 TSMC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비율 100%를 선언했고, IBM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90%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국내기업들도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비율 100% 달성을 선언하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LG전자는 SBTi 참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했고, 2030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사용비율 100%를 위한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에너지 경영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도입했다.

기후변화 이외에 2020년 9월 출범한 '자연자본 관련 금융공시 태스크포스(TNFD,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에서 발표한 생물다양성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전자·반도체 기업은 제품 생산과 폐기까지 전 과정에 수반되는 자연자본을 정의하고, 잠재적인 영향과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주요기업 기후변화 대응

기업명	기후변화 대응 전략(이행)과제	RE100	SBTi
삼성전자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경영 확대 등 5대 기후변화 대응 실행 전략 수립	-	-
LG전자	탄소중립 2030 달성, 재생에너지 100% 전환 2대 전략목표 설정 및 실행 과제 이행	가입 추진 中	Scope1,2 '17 대비 54% 감축, Scope3 '20 대비 20% 감축 목표
SK하이닉스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협력사/공공부문 협력 2개 부문 전략 수립	2050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100% 목표 선언	-
Apple	전체 공급망 및 사업장 환경 지속가능성 지원	재생에너지 100% 실현 완료	Scope1,2,3 '19 대비 62% 감축 목표
Intel	전체 공급망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Net-Zero 달성 지원 및 관리	2030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100% 목표 선언	-
IBM	재생에너지, 온실가스 배출 관련 세부 정량 목표 및 Target 연도 설정 및 관리	2030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90% 목표 선언	-
Sony	제품 기획 설계, 조달, 이노베이션 전 단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설정 및 세부 과제 관리	2040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100% 목표 선언	Scope1,2 '18 대비 72% 감축, Scope3 '18 대비 45% 감축 목표
TSMC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사용, 기후변화 관련 이니셔티브 참여 등 세부 과제 관리	2050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100% 목표 선언	-

※ 자료 : 공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KPC 재구성

이번 '전기·전자·반도체 산업 ESG 경영전략'은 한국생산성본부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였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김예나 연구원

지난달 3월 25일부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비전과 이행계획이 법제화된 만큼 추진과정에서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하고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등 분야별로 시책을 열거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대표적이다.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개발사업 등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탄소중립 도시 지정, 녹색 건축물 및 녹색교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하고, 기후위기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후위기가 생태계, 대기, 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 정보관리체계도 운영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지역 및 계층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재교육, 재취업 및 전직(轉職)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도록 하고, 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지원도 규정하고 있다.

‘녹색성장’은 녹색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기업의 녹색경쟁과 녹색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 및 기후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 제도를 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체계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분야별 시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영향평가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 배출권·목표관리 - 탄소중립 도시 - 지역 에너지 전환 - 녹색건축·교통 - 흡수원·CCUS - 국제 감축사업 - 종합정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시·예측 - 기후위기 적응대책 (국가, 지방, 공공기관) - 지역 기후위기대응 - 물 관리 - 녹색국토 - 농림수산 전환 - 적응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안전망 - 특별지구 - 사업전환 - 자산손실 최소화 - 국민참여 - 협동조합 활성화 -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경제 - 녹색산업 - 녹색경영 - 녹색기술 - 조세제도 - 녹색금융 - 정보통신 - 순환경제
기반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확산(지자체, 생산소비, 녹색생활,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			
	기후대응 기금			

※ 자료 : 환경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진행 현황



김선엽 연구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EU 회원국들이 탄소감축 입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지난 3월 15일 유럽연합(EU) 이사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이사회 타협안을 최종 승인했다. CBAM은 지난해 7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탄소감축 입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 입법안 패키지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을 목표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배출권거래제 강화, 자동차·항공부문에서의 탄소배출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CBAM은 탄소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탄소배출을 이전하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사회 타협안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에너지 등 5개 품목에 CBAM을 적용하고, 생산 과정에서 배출하는 직접배출을 적용범위에 포함하였다.

유럽의회는 5개 품목 외에 유기화학물질, 일부 플라스틱 등의 품목을 추가하고, 간접배출을 포함할 것으로 요구해 왔다. 유럽의회는 6월 본회의에서 의회안을 표결로 확정할 예정이다.

CBAM은 올해 안에 심의 및 의결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회 의회안이 정해지면 하반기 중에 유럽의회 및 이사회, EU 집행위원회가 3자 협상을 통해 최종안이 확정된다.

CBAM은 2023년 발효되지만 2025년까지 전환기간이 적용될 전망이다. 전환기간에는 탄소배출량 및 원산지 부과 탄소가격 등을 보고해야 한다. 2026년 이후에는 수입업체가 인증서를 구입해 제출해야 하는데, 가격은 EU-ETS(Emission Trading System)의 배출권을 기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추진 경과 및 일정

시기	추진내용
2021.7.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집행위원회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권거래제 강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 자동차·항공 부문 탄소배출 규제 강화
2022.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이사회 CBAM 이사회 타협안 최종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 - 적용범위 : 생산과정에서 배출하는 직접배출
2022.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CBAM 의회안 표결
2022년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의회 및 이사회, EU 집행위 '3자 협상' 후 최종안 확정
2023. 1.1 ~ 2025. 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CBAM 시범 도입(전환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품의 탄소배출량 및 원산지 지불탄소가격 등 보고 의무
202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CBAM 본격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 - 수입업체 CBAM 인증서 구입 및 제출 의무

※ 자료 : European Council , PWC 등

ESG 통계 지표

2022년 4월 1일 기준

1. ESG 금융

(1)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 종목 수

(단위 : 개)

	'21.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2.1월	2월	3월
녹색채권	122	122	131	135	144	145	151	162	172
사회적채권	663	689	710	747	765	788	794	820	835
지속가능채권	144	161	178	181	199	216	230	233	237

(2)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 잔액

(단위 : 천억 원)

	'21.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2.1월	2월	3월
녹색채권	129	128	139	141	148	148	156	168	173
사회적채권	1,079	1,125	1,166	1,214	1,247	1,273	1,273	1,306	1,331
지속가능채권	129	140	153	154	165	180	175	181	182

2. ESG 평가

ESG행복경제연구소 국내 시총 100대 기업 ESG평가

(단위 : 개)

	S	A+	A	B+	B	C	D
종합등급	-	16	40	23	17	4	-
E	-	4	28	25	19	14	10
S	1	8	46	31	12	2	-
G	19	42	19	10	10	-	-

자료 : ESG행복경제연구소

3. 기타 통계

대륙별 SBTi* 가입 기관 수

대륙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한국	한국 제외			
가입 기관 수	24	1,443	14	502	70	438	86

* 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 (과학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

2022년 ESG 뉴스레터 이슈 주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금융
2월	비재무정보 공개 법제화 및 TCFD 기준 채택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철강
3월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및 법제화 동향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식품산업
4월	ESG위험 방지를 위한 Taxonomy 법제화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전기·전자·반도체
5월	생물다양성협약과 국내외 정책 동향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자동차
6월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과 배출권거래제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유통

7월	여성임원 할당제 시행 주요 환경 정책의 경제성 분석
8월	IFRS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주요국의 자연자본 보전 정책
9월	플라스틱 규제 동향 및 과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구축 동향
10월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 추진 동향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
11월	한국기업의 ESG 평가 결과와 과제 사회적 가치 측정과 활용
12월	COP27 개최 결과 및 평가 국내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

※ 상기 주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및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SGI

ESG위험 방지를 위한 Taxonomy 법제화

이진 연구원
T. (02)6050-3143 | E. jlee99@korcham.net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전기·전자·반도체

김보비 객원
T. (02)398-7669 | E. bbkim@kpc.or.kr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김예나 연구원
T. (02)6050-3141 | E. yenakim@korcham.net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진행 현황

김선엽 연구원
T. (02)6050-3139 | E. sunykim@korcham.net

ESG 통계 지표

김선엽 연구원
T. (02)6050-3139 | E. sunykim@korcham.net